

한국의 다문화 형성과 종교의 역할

박성호*

- I. 서론
- II. 한국의 다문화 현황
- III. 다문화사회와 종교
 - 1. 종교와 사회통합
 - 2. 다문화와 다종교
- IV. 다문화사회를 위한 종교의 역할
- V. 결론
- 참고문헌

I. 서론

21세기는 절대적 주권론과 국민국가중심의 체계가 붕괴로 인한 글로벌리즘, 신자유주의가 주창되는 대변혁의 시대이다. E.B.타일러는 문화를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¹⁾로 규정한다. 하지만,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대규모의 자본과 정보, 기술, 사람, 상품 등의 항시적 이동은 세계를 분열과 통합, 동질성과 이질성이 서로 뒤엉키며 문화의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를 가속화시키면서, 더 이상 문화가 어느 한 지역, 사회, 집단이라는 공간에 ‘묶여’ 있지 않게 된 것이다.

국가 구성 단계에서부터 인종적, 문화적 배경이 매우 다양한 구성원을 포괄해야 했던 국가뿐 아니라 한국과 같이 오랜 기간 ‘단일민족국가’ 전통을 유지해온 사회에서도 이주의 본격화에 따른 새로운 문화의 유입과 다원화가 빠르게 진행되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객원연구원

1) Edward Burnett Tylor,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 v. 1, New York ;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 1.

고 있다.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교차하는 맥락은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문화 지형의 전면적 재구성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 일반적 현상이 되고 있음을 분명하다.

다문화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이어서 단순히 다국적인 외국인 및 여러 외국의 문화가 자국의 문화 속에 유입되어 섞이거나 섞여있는 현상만을 다문화라고 정의하기는 어렵다.²⁾ 다문화 된 사회는 사회구조와 제도가 다문화 현상을 반영하고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임을 인정하는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의 절실한 문제는 다문화 된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공존과 불평등의 시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합성을 높이면서 다양성 증대에 따른 사회적 분절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³⁾의 창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모색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문화 사회가 초래하는 다종교의 문제이다. 종교란 인간의 행동양식의 가장 심층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인간의 모든 것을 규율한다. 때문에 종교를 절대신념체계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종교는 절대신념체계이며 구조적 세계관인 것이다.

절대 신념체계는 다른 신념체계와 만나면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종교시대의 사회통합은 복잡한 양상을 떨 수밖에 없다. 이는 이미 많은 선발 다문화국가들이 경험한 종교문제로 인한 갈등으로부터 한국도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⁴⁾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시대를 맞아 종교역할의 재검토를 통해, 종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정책에 관한 국내외의 사회학적, 정책학적 이론들을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기초조사로

2) 한건수, 비판적 다문화주의,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편), *다문화사회의 이해*, 동녘, 2008, p. 153.

3) 유의정 외,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정책보고서 제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0, p. 7.

4) 1996년 새뮤얼 헌팅턴은 '문명충돌론'을 제기했다. 냉전 종식 이후 미래 세계 정치를 전망하면서, 중요한 축은 이데올로기나 경제적 요소가 아니라 종교, 언어, 역사, 조상 같은 문명적 요소, 곧 다른 문명 간 충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문명이 정신·물질과 관련된 인간집단의 공유된 체계라면, 종교는 이 공유된 체계 내지 집단 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문명 충돌론은 결국 종교 충돌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유엔도 1980년대 미국과 서유럽 학계에서 문명의 충돌이나 종교 전쟁의 불가피성 등을 경고하고 나서자 유엔 총회 결의문 "종교 신앙에 근거한 비타협적 태도와 차별 제거에 관한 선언(A/RES36/55 - 1981.11.25.)을 채택하기도 했다.

서 정부 통계자료를 비롯하여 각종 통계 자료를 활용하며 각종 언론의 다문화 관련 보도내용과 여러 인터넷 매체에서 다룬 내용도 포함될 것이다.

II. 한국의 다문화 현황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정부정책과 민간단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경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결혼 이주여성의 처우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게 된 것과 관련이 깊다. 결혼 이주여성문제의 해법으로 '다문화'가 채택되었고, 2006년부터 '다문화', '다문화주의', '다문화가족' 등의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서울과 경기도 특정 지역에 외국인이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안산시와 부천시, 수원시 등에는 외국인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많은 유입, 결혼이민자의 증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등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림 I> 외국인장기체류자5) 추이(단위 명 %)



자료: 1980~2005) 법무부, 2007, 내부자료에 2011년 통계를 추가하여 재구성

2006~200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외국이주민의 수는 199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여 1995년에는 체류 외국인

5) 김이선 외,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06-02-07), 한국여성개발원, 2006.에서 인용,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전체 체류자와는 차이가 있음.

이 1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0.24%를, 2000년에는 2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 중 0.44%를 차지하게 되었다. 2000년대 초 증가세는 한층 가파르게 진행되어 2005년에는 드디어 전체 인구의 1% 이상을 차지하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도 외국인 체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현재 전체 인구의 1.75%에 달하는 약 87만 명이, 2011년 9월 말에는 약 107만 8천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⁶⁾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1년 12월 말 135만 5천 명을 기록해 국내총인구의 3%에 육박했었다.

<표 1> 우리나라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단위: 명, %)

	2006	2007	2008	2009	2010
체류외국인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전년 대비 체류 외국인 증가비율	121.8%	117.2%	108.7%	100.8%	108.0%
우리나라 총 인구수	48,991,779	49,28,928	49,540,367	49,773,145	50,515,666
우리나라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1.86%	2.16%	2.34%	2.35%	2.50%

자료: 법무부, 2011, 「국내체류 외국인/불법체류자 현황 중」

현재 정부가 표방하는 다문화정책은 국내로 이주한 결혼이민자들을 한국인,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의 이해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는 한국과 달리 이민국가 형태로 발전한 호주, 캐나다 등에서 발전한 다문화주의는 민족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헌법 원리와 사회의 이념과 가치에 합치한다는 이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면에서 차이가 난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언어, 문화, 민족, 종교 등을 통해서 서로의 정체성(identity)을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적 질서를 말한다. 이에 비해 동화주의는 다민족, 다문화사회의 통합에 유효하지 않고,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동화주의는 국민통합 또는 사회통합을 원리(ideology)로 하여 소수의 문화, 언어, 생활습관을 보호하고, 또 직업이나 교육의 기회에서 인종차별 금지 등 정책적으로 소수를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한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용어 그대로 정의하면 ‘다양한 문화’, ‘여러 나라 여러 종류

6) 김이선 외, 앞의 책, 2010, p. 7.

의 생활양식'이란 뜻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민족구성으로 이에 부합되는 정치적 문제, 인권, 복지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다문화' 내지 '다문화주의'라는 용어가 생성된 것⁷⁾ 또는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통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는 이념체계⁸⁾ 혹은 체계적인 이론이나 조직적인 운동이라기보다 특정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의 억압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또는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 배양 및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과 행위⁹⁾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정책 목표로서 '다문화주의'를 표방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문화교육은 강력한 동화교육을 지향함으로써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다문화사회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 가치관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이주민의 문제에 대해서는 배제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다문화수용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 정책'의 틀이 외국인 노동자와 가족을 제외한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이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제결혼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주된 정책대상이 되고 있다.

다문화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은 어느 면에서는 선진국보다 앞서 가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여전히 경직되고 강압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 대해 동정심을 갖고 시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는 하지만, 이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보다는 한국의 주류사회와 문화에 일방적으로 통화시키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들이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경제적으로 기여했더라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속과 강제 퇴거하는 출입국 관리 행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국제결혼 여성 이주자의 경우, 출신국의 문화와 상이한 한국의 남성중심의 가족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한국의 적응프로그램은 한국 문화에의 통화를 강조하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국제결혼 이주자

7) 최경옥, "한국에 있어서의 다문화의 현법적 시각", 『제4회 동아시아 공법학의 현황 및 발전 추세 국제세미나 논문집』, 2010. 4. 28. p. 228.

8) 윤인진,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한국사회복지학회 동북아시대위원회 용역과제(07-7)』, 2007, p. 73.

9) 정상준,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외국문학』 43, 열음사, 1995, p. 81. 유의정 외,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정책보고서』 제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0, p. 7.

들의 적응의 어려움과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도 한국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다. 직장에서의 차별과 인종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이 깊은 법률 중 하나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규정은 차별모형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외국노동자교체 순환정책'을 담고 있다.¹⁰⁾

일반적으로 외국의 다문화 관련 정책은 이주자의 혼인, 출산, 양육과 보건·의료 및 교육에 관한 관리와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에 다문화란 용어가 범람하면서도 정작 다문화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문화 국가로 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인은 아직도 혈통주의를 중시하고¹¹⁾ 있다. 이는 다문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시각과 구분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아직 한국인들이 다문화 다민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소수의 다문화 이주민에 대하여 적극적 포용의 수준은 아닌 단지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며, 단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보면¹²⁾, 한국과 교류가 빈번하거나 다문화 이주자의 출신국에 해당하는 외국인 집단을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몽골, 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새터민(탈북자), 중국의 조선족 등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응답자들은 미국인을 가장 가깝게 여기고 있었다. 이어서 새터민, 조선족의 순서로 나타났고, 가장 거리감을 멀게 느끼는 대상은 남아시아와 몽골사람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다문화 국가의 구성은 주로 동남아계 혹은 중국계로 대표되는 아시아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한국인의 생각과 시각은 상당한 문제를 내포할 수 있다. 다문화 이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2세나 3세에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에서 접하는 다문화 이주민들 중 일부가 한국에서의 삶이 상당히 지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아직 소수 다문화 이주자들에 대한 인식과 포용의식이 부족함을 나타내고

10) 이 법률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사용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동법 9조)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18조). 취업기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로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 대상이 된다.

11) 황정미 · 김이선 · 최현 · 이동주/ 2007; 장태한, 2001; 김상학, 2004.

12) 황정미 · 김이선 · 최현 · 이동주,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있다는 의미이다.¹³⁾

다문화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주류 한국인들의 인식행태는 한국 다문화 정책 유형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 주류 사회의 협조나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문화적 상황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 외국인 혐오가 보다 심각하며, 또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¹⁴⁾ 이러한 사실은 한국이 다문화 국가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

III. 다문화사회와 종교

1. 종교와 사회통합

다문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각국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전통과 분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문화제도도 하나의 사회제도인 한 그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다.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종교의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사회통합과 사회변화라고 한다면 사회통합의 기능이란 종교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규범을 정당화하면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공통된 집단의식을 마련해주고 이에 따라 사회질서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종교의 사회통합의 기능은 다원주의 종교체계 속에서 종교적 활동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복잡한 사회관계속에서 분열과 갈등이 팽배한 상황을 화합과 일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없이는 불가능하다. 각각의 종교는 한국사회의 사회보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그 영향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다종교사회이다. 불교, 유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한국사회에 공존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3년도 한국의 종교분포는 다음과 같다.

13) 김상학, 「소수자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제1호, 2004.

14) 박병섭, 「다문화적 소수자 문제에서 한국의 특수성」, *사회철학* 12호, 2006.

<표 2> 한국의 종교분포¹⁵⁾

구분		비율(%)
종교인구	불교	47.0
	개신교	36.8
	가톨릭	13.7
	유교	0.7
	원불교	0.4
	기타	1.4
비종교 인구	종교없음	46.1

불교, 개신교, 가톨릭, 유교, 원불교, 기타 종교는 때로는 서로 경쟁하며 때로는 서로 갈등하며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주도하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 방면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도 이러한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다. 바람직한 사회를 추구하는 인간의 활동은 인간사회 내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기저를 이루고 있다. 어느 인간사회에서나 소외된 개인이나 집단을 도우려는 상부상조의 정신은 인간의 사회활동의 보편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종교적 계명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의 모든 종교는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자선을 베풀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에 의하면 불교, 개신교, 가톨릭의 3개 종교가 전체 종교인구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들 3개 종단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아니할 수 없다.

한나라의 제도는 국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 강조되고 삶에 대한 성찰이 근대화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의 대상과 질도 발전하게 되었다. 예컨대, 현대사회복지사업은 그 대상자의 자력에 의한 회복을 지향한다.¹⁶⁾

종교의 특징은 신앙을 함께하는 자들끼리 신앙적 공동체를 갖는 데 있다. 같은 신앙을 가진다는 원칙 위에 교단은 신자에게 교리를 철저히 가르치며 공동체의 유지를 도모하는 한편, 외부에 대해서는 전도 혹은 포교를 한다. 이러한 전도 혹은 포교는 신앙의 자유를 그 핵심으로 한다. 종교의 자유는 자유권 발달의 선구적 역할을 하여왔으나 타종교와의 관계에서는 갈등을 유발하는 주원인이 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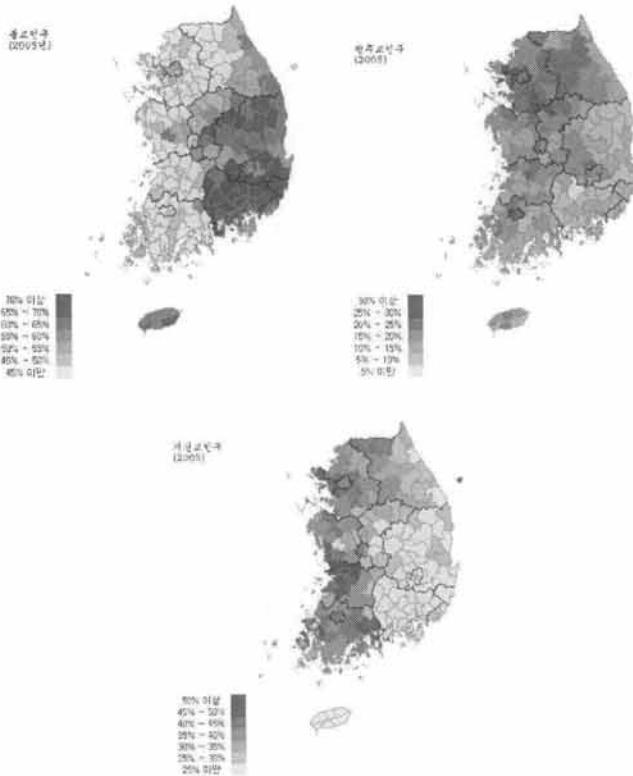
15) 한국 통계청 2003년도 발표자료 참조.

16) 모리나가 마쓰노부, 「불교사회복지학」, 이해숙 옮김, 서울: 불교시대사, 1992, p. 71.

하였다.

우리나라의 2005년 인구총조사 당시 3대 종교의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¹⁷⁾

<그림 2> 3대 종교의 지역별 분포



가톨릭이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 불교는 경상도에, 개신교는 전라도에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다종교사회에는 다양한 세계관이 공존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나 복지사회와 같은 정치경제적 이념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이념 틀로서의 세계관이 곧 다양한 상황, 곧 다종교사회에서 안정된 사회질서를 이룬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사회적 불안정과 갈등이 정치경제적 요인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

17) 한국 통계청 2005년도 발표자료 참조.

나 정치적 이념이나 경제적 비전이 제시되어도,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기도 하고 안정되기도 한다. 그 근본 원인은 그 사회가 주도적 가치관 또는 세계관을 공유하는가에 달렸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종교가 사회규범보다 상위에 있다는 종교적 확신에서 비롯된다. 그 확신 위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무한 보장을 주장하고 또 행사하는 데서 종교간 갈등이 야기된다. 절대신념체계로서의 종교적 세계관 틀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무제한 행사할 때, 무엇보다 먼저 종교 간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로, 사회규범과 정치질서에 혼돈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주도적 가치관을 공유함으로서 사회 안정을 이룩하는 근본적인 과제인 것이다. 우리사회는 모든 세계관이 공존하면서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사회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심각한 다종교사회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관용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다종교사회의 건강한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대사회의 건강한 다종교질서를 창조하는 것은, 곧 오늘의 지구촌이 지난 민족과 종교사이의 갈등에서 야기되는 시대적 문제들을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를 지닌다.

2. 다문화와 다종교

지금 한국은 단일 민족국가라는 위상이 무색할 정도로 외국인 숫자가 120만을 넘어서고 있다. 종교계의 다문화 관련 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이웃 종교와 문화, 그리고 피부색이 다른 낯선 이들과의 공존은 우리의 종교계에도 적지 않은 과장을 불러오리라 예상되고 있다.¹⁸⁾

1989년 대표적인 다문화국가인 프랑스의 한 중학교에서 모로코 출신의 세 여중생이 종교적인 이유로 수업시간에 그들의 '헤드스카프'를 벗으려 하지 않아 퇴학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정교분리원칙의 옹호와 폴레랑스라는 이름으로 양분되었다. '헤드스카프' 사건은 프랑스의 이민통합문제, 프랑스인의 정체성 문제, 라이시테(정교분리)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 사건

18) 기독교계에서는 이와 관련 2012.4.28. 제7회 한국조직신학자 전국대회의 주제를 '다문화·다종교시대의 교회의 선택'으로 하였다. 김균진 박사는 "한국의 기독교는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해야 한다"며 "내 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면서 한국 사회를 위해 함께 봉사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크리스천투데이, 2012.04.30자 기사 참조,

이었다.¹⁹⁾

2005년 인종폭동²⁰⁾ 이후 프랑스다문화정책모델은 이주, 교육, 노동 분야의 경우는 동화주의 모델을 유지하고 있지만 문화 분야는 2007년 '국립이민역사관'을 개관하고 방송매체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다문화성 개선조치들과 체계적인 퍼드백 시스템 도입, 방송 관련 직업의 다문화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고용조치의 검토 등 다문화주의모델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종교관의 차이로부터 일어난 갈등은 비단 프랑스의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의 이슬람 첨탑금지를 비롯해 이탈리아와 벨기에에서 반이슬람 정서가 확산되는가 하면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전체 독일 인구의 5%가 터키계 이슬람교인으로 집계되는 등 이는 전 유럽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의 무슬림은 이미 큰 세력으로 미국의 퓨 포럼(Pew Forum)에 따르면 유럽 내 무슬림 인구는 유럽 인구의 5% 수준인 3,811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세계는 지금 지구촌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다문화사회로의 정착이 활발해진 시점에서 특히 기독교적 전통과 충돌이 잦은 이슬람 등에 의해 갈등을 빚고 있다. 다문화로 인해 다종교 사회가 만들어지고 다종교가 다문화사회의 진입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다종교 사회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샤머니즘부터 불교, 유교와 근세에 전래된 천주교, 기독교, 대종교 등 민족신앙과 이슬람교까지 각종 종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회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와 같은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단군상 사건이나 훼불사건 등과 같은 종교간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며 국내 종교간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²¹⁾ 종교간 갈등은 물론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이기도 하

19) 2004년 2월 프랑스 하원, 2004년 3월 프랑스 상원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학교 내에서 드러내놓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여야의원들의 거의 대다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교육부는 5월, 새 학기부터 학생들이 지켜야 할 <시행세칙>을 발표하였다.

20) 2005년 11월, 프랑스에서는 자동차와 상점이 불에 타고 거리에 화염병이 날아다니는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다. 소요 사태를 일으킨 이들은 주로 아프리카계 또는 이슬람계의 이민 2~3세 젊은이들이었다. 폭동에 불씨를 던진 것은 10대 소년 2명의 죽음으로 파리시 외곽 지역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해 변압기 주변에 숨어들어간 이민 3세대 소년 2명이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프랑스 방리유(banlieue·도시 외곽 지역)의 청년들은 그동안의 차별에 분노하며 화염병과 돌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것이다.

21) 정부는 국내에서도 날로 심화되는 종교 간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외부에 의뢰한 연구 용역보고서가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헤럴드 경제. 2011.8.30 기사 참조

다. 따라서 건전한 종교 풍토의 조성이 정말 중요한 과제이다.²²⁾

IV. 다문화사회를 위한 종교의 역할

현재 정부공식통계(행정안전부, 2008)에 따르면, 외국인 지원기구는 총 564개가 있는데,²³⁾ 이중 공공기관이 102개, 종교단체가 121개, 순수민간이 341개로 종교단체의 다문화사회정책 참여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²⁴⁾ 우리나라 종교계의 이주민 지원활동에 대한 사례발표²⁵⁾에 의하면 천주교

22) 매일경제, 2011.7.26자 사설은 “노르웨이 테러가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 등 극우적 편견을 가진 인물의 소행임이 드러나면서 국내에서도 반(反)외국인, 반다문화주의 움직임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급속도의 다문화 정책의 부작용과 외국인 혐오증이 맞물려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왜곡된 시각이 커지고 있어서다. 자칫 이런 기류를 무시하고 방치할 경우 사회불안 요소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위기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인 것이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30만 명으로 이 중 외국인 노동자는 60만 명, 다문화가정도 18만 가구에 달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아직 크게 부각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외국인 거주자 증가와 비례해 종교·인종적 갈등이 조금씩 표면화되는 추세다. 급격한 다문화주의 유입과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장차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경계할 것은 다문화 반대 움직임이 날로 커지고 조직화되는 경우다. 현재 관련 시민단체만도 10여 개에 이르고 일부 인터넷 카페의 경우 회원 매일경제, 2011.7.26자 사설은 “노르웨이 테러가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 등 극우적 편견을 가진 인물의 소행임이 드러나면서 국내에서도 반(反)외국인, 반다문화주의 움직임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급속도의 다문화 정책의 부작용과 외국인 혐오증이 맞물려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왜곡된 시각이 커지고 있어서다. 자칫 이런 기류를 무시하고 방치할 경우 사회불안 요소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위기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인 것이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30만 명으로 이 중 외국인 노동자는 60만 명, 다문화가정도 18만 가구에 달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아직 크게 부각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외국인 거주자 증가와 비례해 종교·인종적 갈등이 조금씩 표면화되는 추세다. 급격한 다문화주의 유입과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장차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경계할 것은 다문화 반대 움직임이 날로 커지고 조직화되는 경우다. 현재 관련 시민단체만도 10여 개에 이르고 일부 인터넷 카페의 경우 회원 수가 6천 명에 이를 만큼 세력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남아 등 외국인 노동자를 ‘바퀴벌레’라고 표현하는 등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이슬람 국가 노동자를 국내로 들이지 말라며 노동부에 압력을 넣고 방송국을 대상으로 집단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까지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종교·인종을 차별하는 편협한 민족주의나 외국인 혐오증도 문제지만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 갈등을 키우는 정부의 부실한 정책도 개선되어야 한다. 다문화주의를 적극 이해시키는 상호 소통의 노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급격히 늘고 있는 외국인 범죄율 등 갈등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이제부터 정부가 적극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적고 있다.

23) 이는 시군구별 2.3개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의 경우 중앙에서 이주민 지원활동이 시작됐다고 한다. 1971년 주교회의를 열어 '이주사목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92년 서울대교구에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를 개설했다. 2003년에는 각 교구마다 이주사목 대표사제회의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천주교 신자가 대부분인 필리핀인들의 경우 자양동 성당에서 본국의 신부를 초청해 따갈로그어 미사를 실시해 매주 2,000여 명이 신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천주교 의정부교구는 2009년 10월 25일 구리시 인창중앙공원에서 <제2회 다문화 축제, 바자회 '엄마의 나라, 아내의 나라'>를 개최한 것을 들 수 있다. 축제와 더불어 진행되는 바자회에서는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아동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베트남, 필리핀 등 다른 여러 나라의 전통물품과 음식을 전시 및 판매하기도 하였다.²⁶⁾

개신교는 1993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를 조직하면서 이주민 지원을 위한 공식적인 틀을 갖췄다. 이중남 한국YBA 정책실장에 의하면 "개신교의 이주민 활동은 두 가지 맥락으로 전개되는데 첫째는 사회운동에 앞장서 오던 민중교회운동의 연장으로서의 지원활동이고, 둘째는 '미전도 종족'²⁷⁾을 찾아나서는 해외선교의 연장으로서 그 대상을 이주노동자로 돌린 것"이라고 한다.

불교계는 2000년대 들어서 이주민노동자들 지원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96년 서울 자비의집이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2000년 구미 보현의집, 2004년 안산 보문선원 등이 설립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2008년에 개별 단체들의 모임인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가 설립돼 공모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불교여성개발원의 '지혜로운 여성'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여성주의 상담,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및 복지 프로그램, 상담원의 자세와 기초이론, 다문화가정지원 서비스 및 복지프로그램, 상담원의 자세와 기초이론, 다문화가정 법률 및 제도, 다문화가족의 이해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론 및 실천

24) 현재 종무실의 다문화사회정책으로는 전등사 이주민 초청잔치(조계종), 명락사 다문화가족 음식문화체험(천태종), 한국기독교협의회 다문화 이웃과 함께 하는 성탄축하음악회(기독교), 서울대교구 외국인 노동자 부활대축제(천주교), 지구촌사랑나눔 외국인 근로자 기독문화 체험 한마당(기독교),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URI), 다문화 가정 종교문화캠프(연합) 등이 있다.

25) 이중남, 불교계 이주민 지원활동의 현황, 2011.12.20.자 불교포커스 참조

26) 경기신문, 2009.10.1. 기사 참조

27) 미전도 종족은 그리스도인의 자생적인 공동체가 없는 종족집단을 말하며 관련단체로는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의 산하 독립기구로 1993년 설립되어 교단, 선교단체, 교회와 연합하여 미전도종족 선교의 복음화를 이루며, 교회 및 선교단체의 전략선교 컨설팅을 위해 사역하는 UPMA(미전도종족선교연대)가 있다.

적 토대를 확장시키기도 하였다.²⁸⁾

그 외 한국종교인평화협의회(KCRP)의 <제1회 KCRP 종교인 다문화 평화축제>와 한국종교연합의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종교문화캠프>와 같은 사례도 있다.

신광철에 의하면,²⁹⁾ 현 단계 한국종교계의 다문화사회의 지원 활동은 천주교의 정부교구와 같이 축제를 통한 소통을 도모하는 유형, 명학사의 명학빌리지와 같은 자립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유형, 불교여성개발원과 같은 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론 및 실천적 토대를 확장시키는 유형, 그리고 한국종교인평화협의회의 종교인 다문화 평화축제와 같은 연합과 체험을 통한 참여와 소통의 증진을 모색하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주외국인들은 모국에서 가지고 있던 종교적 정체성과 일치하는 종교기관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종교기관을 활용하기도 하여 종교는 외국이주민의 한국사회에의 적응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문화가 심화될수록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공존하게 되고 이로 인한 종교관의 차이는 종교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종교간 갈등은 물론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때문에 다문화 진입 시대를 맞아 종교관련 다문화 관련 정책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인천의 경우 절반이 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종교 법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즉, 인천에 있는 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운데 5곳이 기독교와 천주교 등 종교 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해당 종교에 거부감을 느끼는 다문화 가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³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뿌리내리는 것을 돋는 기능을 하는데 종교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많아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종교 법인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에 제한을 둘 수 없지만 종교에 따라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다양한 문화를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타종교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 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28) 불교신문, 2008.8.13.기사 참조

29) 신광철, “다문화사회와 종교”, 『종교연구』 제59집, 한국종교학회, 2010, pp. 9-10.

30) 경인일보, 2011.6.15. 기사 참조. 이 기사는 우즈베키스탄 결혼이민자 나모(28·여)씨는 “연 수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면 입구부터 교회가 있다. 무슬림을 강하게 믿는 친구들은 기독교가 운영 중이라 센터에 가지 않는다”며 “교회가 운영하는 곳에 다니는 것 자체가 무슬림에게는 비난받을 일이다”고 전했다고 적고 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³¹⁾에서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종교간 화합을 이루는 것은 사회의 통합에 아주 중요하다. …… 예를 들어 7대 종단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종교문화대축제 및 이웃종교 화합주간을 비롯해 종교간 대화모임과 종교인 교류대회, 이웃종교 성지순례, 종교청년 평화캠프 등 이미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이런 종교간 화합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하였으나 현재 문광부의 예산 중 종교 갈등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의 (URI-K) 종교평화 지수 제정을 위한 콜로키움, 한국종교연합 평화포럼,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종교문화캠프, 종교연합 자원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 종교화합활동사업 지원 예산이 전부이며 종교간 화합이 문광부 업무계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아주 미미하다.

종교는 사회적으로 가장 강력한 신념체계로 결속된 집단이며, 그 어떤 사회적 이익이나 이념 집단보다 오랜 역사를 갖고, 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종교들 간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길로 안내하려는 노력은, 일반 사회의 이익과 이념 집단 사이의 대립과 마찰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모델이 될 것이다.

V. 결론

아직까지 한국의 다문화사회는 성숙한 상태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급속한 외국 인구의 증가는 우리에게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006년 조사가 시작 된 이후 2009년까지 매년 20% 이상 증가율이 상승하였고 저출산, 3D업종 기피 현상으로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 서 2050년 사이에 인구의 약 14%(643만 명)를 수입해야 한다는 유엔의 전망³²⁾ 등은 이제 우리나라의 다문화는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은 다분히 동화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즉 소수집단의 결혼이민자에게 출신국의 문화 정체성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문화에 신속하게 적응함으로써 다수집단 사회의 성원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다문화 담론은 보편적 가치나 인권보다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

31) 법보신문, 2012.5.21.자 기사 참조

32) 머니투데이, 2012.3.21.자 기사 참조

반으로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획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거나 국내 빈곤 계층과의 형평 문제, 재정 부담, 사회적 부담이 문제시 될 땐 반발과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쳐서 한국 사회에 통합시키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국인의 차별적인 의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앞서 살펴본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하나는 현재 프랑스 사회를 구성하는 주류 이민자 그룹은 과거 유럽계 이민자와는 달리 종교와 문화적 측면에서 주류 프랑인들과 차이가 큰 이슬람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피부색깔과 종교와 문화, 심지어 거주지역까지 다른 이 새로운 이주민들이 교육, 고용, 주택, 의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주류 ‘프랑스인’이 되기에는 훨씬 더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실에서 존재하는 인종주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통합모델은 너무 추상적이고 이상적이어서 마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차별이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 테 있다.³³⁾ 프랑스의 정치적, 법적 전통은 이주민들의 문제는 출신국가와 무관한 개인으로서의 이주민들의 문제로 여겨진다. 행정, 의료영역 등에서 통계자료에 인종이나 종교변수를 넣지 않는 관행도 이러한 전통에 기인한다. 그 결과 최근까지도 프랑스사회에서는 이민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지 않는 은폐의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발생한다. 즉 현재 프랑스 다문화사회의 갈등은 프랑스식 동화주의 통합모델 자체가 지닌 한계가 아니라 빈민지역의 청년실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다.³⁴⁾ 이민 2세대들은 프랑스의 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고용시장에서 가장 먼저 배제된다.³⁵⁾ 한국 인구의 약 2.5%는 외국인·귀화자와 그들의 자녀들이다. 앞으로 다문화 정책은 점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정책은 정치적 성향에 기반할 수밖에 없는 정부가 주도해선 안 된다.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에 의거한 참여의 리더십이 필요함을 프랑스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용재는 다문화정책에 있어서의 차별의 형식을 제도적 영역과 비제도적 영역으로 나누고, 다시 비제도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기준으로 동화와 공존으로 나눌 때 제도적 영역에서 배제의 형식은 다름은 다만 다름으로 존재하게 하는데 그것은 동질화되지 않는 차이이므로 다만 차이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33) 박단,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와 무슬림 이민자 통합문제”, 『프랑스사연구』 14, p. 244, 2006.

34) 정민숙, “유럽의 이슬람 정책 강경해질까?”, 뉴스위크 한글판, 16(8): pp. 34-35, 2005.

35) 한승준, 앞의 책, pp. 475-576.

차이가 통합의 대상이 되면 그것은 계서화되고, 차별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의 제도적 차원에서 통합의 다문화정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통화의 형식은 새로운 배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³⁶⁾ 이는 통화주의 모델에 입각한 정책으로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과 다문화 된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이민자들과의 진솔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의 다문화 관련 활동은 우리의 사회 통합에 매우 필요하다.

이에 종교관련 다문화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기대해본다. 먼저 정부의 태도변화이다. 이민사회에의 정착을 위한 이민자의 의지 부족도 문제지만 이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국가의 그릇된 자세 역시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든다. 종교 갈등은 서로 상대의 종교와 관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정신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종교차별금지법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종교간 교류와 이해의 풍토가 없는 상태에서의 제도화는 종교화합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현된다. 정부의 일은 모두 예산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종교 갈등은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느낌이다.

또한 다문화 지원 사업의 시행은 종교간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앞의 인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는 정책이 공급자의 입장보다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고려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두 번째로 종교계에 대한 바람이다. 정부의 민간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주로 'NGO형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위주로 진행되었고, 일부 민간단체들은 정부로부터 대규모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사업영역이 제한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종교단체의 경우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활동은 보다 창의적이며 정부가 수행하지 못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매우 필요한 분야이다. 각 종교의 특성과 종교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조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종교계는 자비, 사랑, 인(仁) 등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 종교계의 다문화활동은 다문화사회의 통합력을 높이고 다문화사회로 막 진입하기 시작한 우리 사회의 문제인 외국인에 대한 차별,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기반을 지니고 있어 종교계의 적극적인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종교계 스스로 종교적 갈등을 없애는 데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종교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평화운동이 보다 많은 종교인들의 공감을 얻고

36) 이용재, “다문화정책에서의 새로운 배제”, 『젠더와 문화』 제3권 1호, 2010, p. 147.

이 운동이 일반 종교인들에게 확산될 구체적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문화활동에 대한 종교계의 협의체 구성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문화사회는 다종교사회를 의미하게 되는데 여러 선행국가들의 경우에서 보듯 이 종교간 갈등은 사회갈등으로 직결되고 있다. 이에 단일혈통의 전통에서 새롭게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춘 종교계의 대승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주제어: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 사회정책, 문화정책, 종교, 종교계의 다문화활동, 절대신념체계

원고접수일: 2012년 5월 17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3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20일

참고문헌

- 강주현, “해외다문화사회통합연구; 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사례연구』, 2008.
- 강휘원, “미국의 소수인종통합정책탐색 : 교육, 복지, 언어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010.
- 곽준혁, “다문화 공존과 사회적 통합”, 『대한정치학회보』 15(2), 대한정치학회, 2007.
- 국회입법조사처, “다문화가족지원사업(현안분석38호)”, 2010.11.29.
- 김남국, “영국과 프랑스에서 정치와 종교: 루시디 사건과 헤드스카프 논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4(4), 2004.
- 김범수 외, 『다문화 사회복지론』, 양서원, 2007.
- 김상학, “소수자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1, 2004.
- 김선택, “다문화사회와 헌법”, 『헌법학연구』 16(2), 2010.
- 김은미 외, 『다문화사회, 한국』, 나남, 2009.
- 김유경, “다문화가족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1.
- 김유경·조애저·최현미·이주연,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14, 2008.
- 김이선 외,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06-02-07), 한국여성개발원, 2006.
- 김정규, “미국, 캐나다, 호주의 다문화주의 비교연구. 사회이론”, 2010 봄/여름, 2010.
- 김혜순, “다문화정책의 주요 쟁점과 입법과제”, 국회도서관보 제 46권 제10호(통권 제364호), 국회도서관, 2009.
- 도리나가 마쓰노부, 『불교사회복지학』, 이혜숙 옮김, 불교시대사, 1992.
- 박단,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와 무슬림 이민자 통합문제”, 『프랑스사연구』 14, 2006.
- 박병섭, “다문화적 소수자 문제에서 한국의 특수성”, 『사회철학』 12호, 2006.
- 박성혁, “다문화교육정책 국제비교연구”, 2009.
- 박성혁·성상환, “다문화교육정책 추진 현황, 과제 및 성과 분석 연구”, 『교육연구와 실천』 72, 2008.
- 박세훈 외,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연구(Ⅱ)”, 국토연구원, 2010.
- 박세훈,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한국도

- 시행정학, 한국도시행정학회, 2010.
- 박진경, “한국 다문화정책의 특성과 발전방향: 다문화정책 모형이론을 중심으로”, 2010 한국정책학회 하계대회 및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10.
- 박채복, “한국 이주자 사회통합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46, 2008.
- 서문기, “사회적 합의형성에 관한 이론적 소고 :분석틀과 정책적 함의”, 『행정논총』 45(4),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7.
- 서종남, “한국사회의 다문화 관련 용어에 관한 연구 : 현황분석 및 다문화교육 관계자 FGI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16-2호, 인하대학교교육연구소, 2010.
- 설동훈, “국민 민족 인종 :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체성, 한국사회학회, 동북“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대위원회, 2006.
- 설한, “킴리카(Kymlicka)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 학회보』 4(1), 2010.
- 신광철, “다문화사회와 종교”, 『종교연구』 59, 한국종교학회, 2010.
- 양기호, “일본의 다문화거버넌스와 한국에의 함의”, 『다문화사회연구』 2, 2009.
- 양인숙 외,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도서출판 한울, 2007.
- 와타도 이치로,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에서 로컬한 공공성 재구축의 의미, 다문화사회 일본과 정체성 정치』, 서울대학교출판부, 2010.
- 유네스코 아시아 ·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다문화사회와 이해』, 동녘, 2008.
- 유용식, 손호중, “다문화 사회 대응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2호 (2009년 6월),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9.
- 유의정 외,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정책보고서 제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0.
- 니시카와 나가오, 윤대석 옮김, 『국민이라는 괴물』, 소명출판, 2002.
- 윤인진,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한국사회복지학회 동북아 시대위원회(용역과제 07-7), 2007.
-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 : 쟁점과 전망”, 『국토』 342, 국토연구원, 2010.
-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42(2), 2008.
- 이상언·최유, “다문화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 지원방안의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 이용승, “다문화주의 정책유형 결정요인 분석: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고려대학

- 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이용승, “독일의 다문화 가족정책”, 『민족연구』, 2007.
- 이용승,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연구』 8, 2004.
- 이용일, “이민과 다문화사회로의 도전: 독일의 이민자 사회통합과 한국적 함의”, 『서양사론』 92, 2007.
- 이용재, “다문화정책에서의 새로운 배제”, 『젠더와 문화』 3(1), 2010.
- 이정관, 『기초생활보장과 공공복지 -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의 정책비교와 이슈』, 도서출판 글로벌, 2009.
- 이종렬, “다문화정책과 민주주의”, 한국행정학회, 2008.
- 이종수, “다문화사회와 국적”, 헌법학회 제58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0.
- 장선희, “한국의 다문화가족 관련법제의 현황과 평가”, 『민족연구』 42, 한국민족연구원, 2010.
- 장진숙, “다문화주의와 국민국가 통합정책 비교고찰-캐나다와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1(3), 2010.
- 정민숙, “유럽의 이슬람 정책 강경해질까?”, 뉴스위크 한글판, 16(8), 2005.
- 정상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법학논총』 26(1), 2009.
- 정상준,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외국문학』 43, 열음사, 1995.
- 조규범, “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 『현대사회와 다문화』 1(1), 2011.
- 조규범, “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 『미국헌법연구』 21(1), 사단법인 미국헌법학회, 2010.
- 조상균·이승우·전진희, “다문화가정지원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8(1),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6.
- 조지해, “한국 다문화정책의 한계와 미래의 대응방향”, 울산발전연구원(연구자료), 2009.
- 조홍식, “민족의 개념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고찰”, 『한국정치학보』 39(3), 한국정치학회, 2005.
- 조현상, “한국다문화주의의 특징과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 논문, 2009.
- 주성훈,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예산현안분석 제38호, 국회예산정책처, 2010.
- 지종화, 정명주, 김도경, “한국의 다문화 국가현상과 새로운 정책모형”, 『지방정부연구』 13(2), 2009.
- 최경옥, “한국에 있어서의 다문화의 헌법적 시각”, 제4회 동아시아 공법학의 현황

- 및 발전추세 국제세미나 논문집, 2010.
- 한승준,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제4차 다문화사회 정책 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 한건수, “비판적 다문화주의”,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편), 『다문화사회의 이해』, 동녘, 2008.
- 한승완, “다문화주의 담론과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정책 방향”, 『경제정책연구』 153,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7.
- 행정안전부, “외국인현황주민자료”, 2011.
- 홍기원,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 황정미 · 김이선 · 최현 · 이동주,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Hans Braun, 정재훈·김태희 역, “사회 연대의 이론과 실천”, 서울EM커뮤니티, 2006.
- Alan C. Cairns, "Political Science in Canada and the Americanization Issue,"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Apparadui, Arjun. "Disjuncture and Difference in the Global Cultural Economy". in Apparadui, A.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1996.
- Charles Hirschman, "Immigration and the American Century", *Demography*, Vol 42, No. 4,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2005.
- Christian Joppke, "Multiculturalism and Immigration: A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Great Britain," *Theory and Society*, Vol.25, No.4, 1996.
- Dirk Jacobs, "Alive and Kicking?" Multiculturalism in Flanders, "International Journal on Multicultural Societies(IJMS)", Vol.5, No.2, UNESCO, 2004.
- Jennifer E. Manning, Membership of the 112th Congress: A Profile, CRS Reprot for Congress, 2011.
- Gelatt, Julia, *Annual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The Real numbers*, 2007.
- Troper, Harold, *Multiculturalism*. in Paul Robert Magocsci(ed.), 1999.

<Abstract>

Multiculture Being Formed in Korea and The Role of Korean Religions

Pak, seong ho(SNU Research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Sciences)

It is difficult to see the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is mature. But rapid rise in the number of foreigners demands us beginning to worry seriously about transition into an Multicultural society.

Since 2004 the number of foreigners has increased sharply. To cope with this situation, Korean Government has made the various policies for multicultural problems.

Now the Government-sponsored Multicultural Policy Coordination is quite adopt the assimilative immigrant policy.

Because The government only support and aid married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to settle in the nation without problems to easily assimilated into Korean culture.

As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is increasing every year, experts on multiculturalism believe that Koreans need to be educated on how to understand an increasingly multicultural society. but In reality, there is no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basis on multicultural reality in Korea, so that these policies performed by each ministries without cooperation and consistency have resulted in conflicts and confusion. To coordinate multicultural policies, we recommend to prepare a basic law on multicultural affairs so that ministries can carry out multicultural policies in a consistent and systematic way.

The recent cultural conflict in France, revealed after Europe's unification, appears to be a case of globalization's internalization among migratory laborers. The resulting conflict between cultures proves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or integration, without multicultural cognizance and civic ethics, is but a prelude to serious cultural conflict. The aspect of assimilative immigrant policy development gives great instruction to us who enter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ism basically respects the difference but not differentiation.

Pulpits in Korea are actively involved in Multi-cultural activities in preparation for the multicultural era.

Pulpits' Multi-cultural activities increase the social unity and will be the foundation for overcome The problems of Korea facing Multicultural society like Discrimination against non-Koreans, Social distance with foreign groups,

But multicultural society is multi-religious society. In cases of countries which already adopted multiculturalism, religious conflicts is factors creating the high social conflict level. so Pulpits in Korea should prepare to take measures for the advent multicultural society.

Given that a multi-cultural society is irrevocable and we must embrace immigrant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provide policies helping immigrants successfully settle in Korea while residents should be aware that immigrants are their neighbors who will develop Korea's future together, creating an integrated local community with emotional support for them to develop a strong multi-cultural society.

The conflict and problem of human societies were solved by their self-reflection and then they process to better future. As this self-reflection, religion is a big role for us. and religion is absolute belief-system, has a large influence in the society.

In the multicultural era, Our society expect that religion contribute to society, and improve the world.

Key Words: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problem, social policy, cultural policy, Pulpits' Multi-cultural activities, religion, absolute belief-system